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CONTENTS

어젠다 추진 경과·연혁 04

제언을 드리며 05

제안 배경 06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10

새 정부에 바라는 인천 경제계 핵심 숙원 18

History

정책제안 추진 경과 / 연혁

인천상공회의소

- 2010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10대 현안 과제
- 2012 제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
- 2014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
- 2016 제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과제

인천상공회의소

- 2017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 2021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Message

제언을 드리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경제계, 시민사회의 기대를 담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기술 대전환,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전통 산업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요구, 공급망 리스크 등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기업이 살아남아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튼튼해야 국가의 미래도 보장됩니다.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좋은 일자리도 세수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중앙과 지방, 국민과 경제계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산업질서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에는
기업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과 경제계, 시민단체의 바람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인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께서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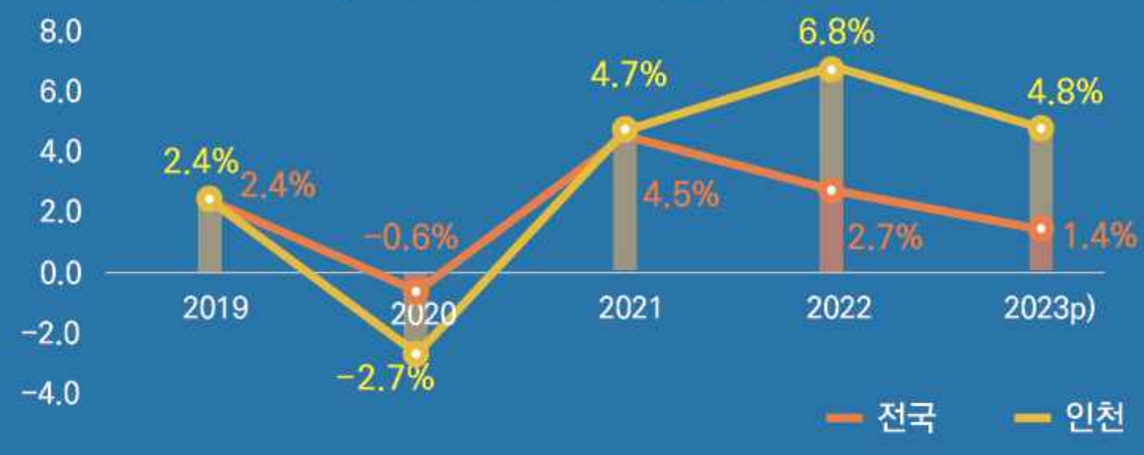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주봉**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재식·김승기·김연옥·이종일**

1 역동하는 경제 도시

인천은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 경제의 핵심 축,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2023년 4.8%)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을 보여줌

인천지역 실질 GRDP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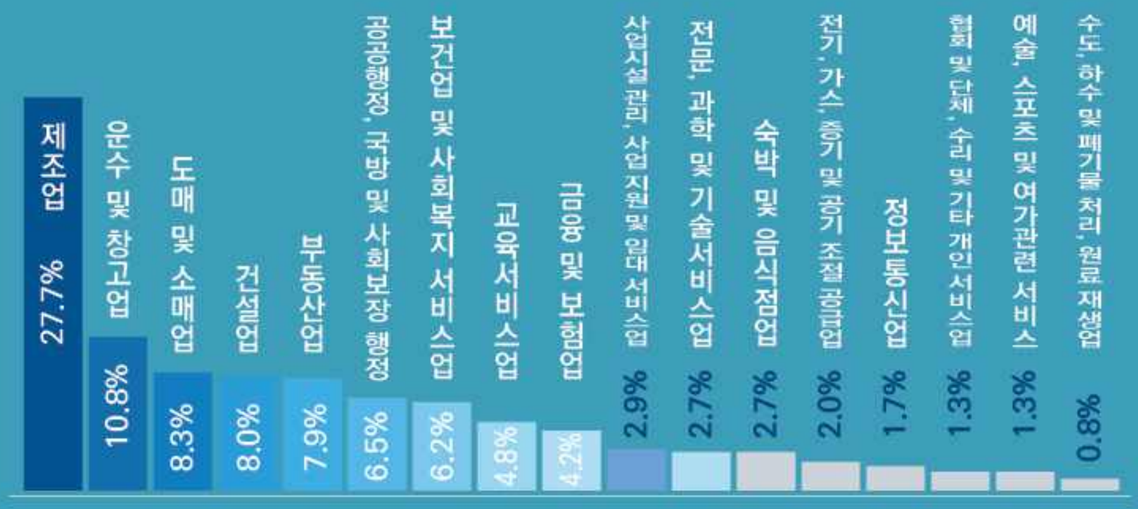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
주 : 1) p : 잠정치 2) 2020년 기준년 가격

2 산업구조의 다양성

인천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고르게 분포

인천지역 산업별 명목 GRDP 비중(2023p)



자료 : 통계청(KOSIS)
주 : 1) p : 잠정치 2) 2020년 기준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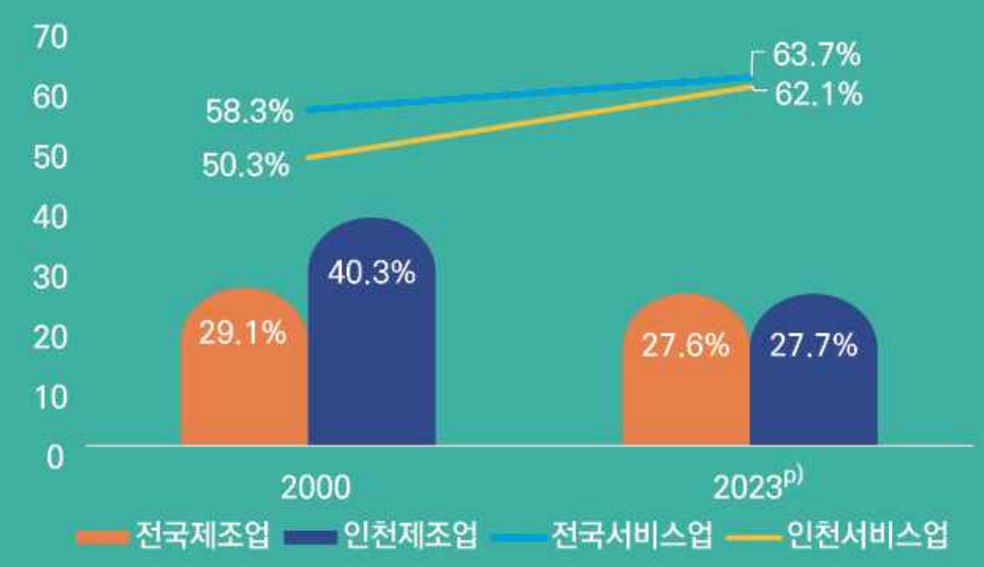
왜 인천경제가 중요한가

인천은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로,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 산업계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 경제의 서비스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음

전 산업 중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변화(명목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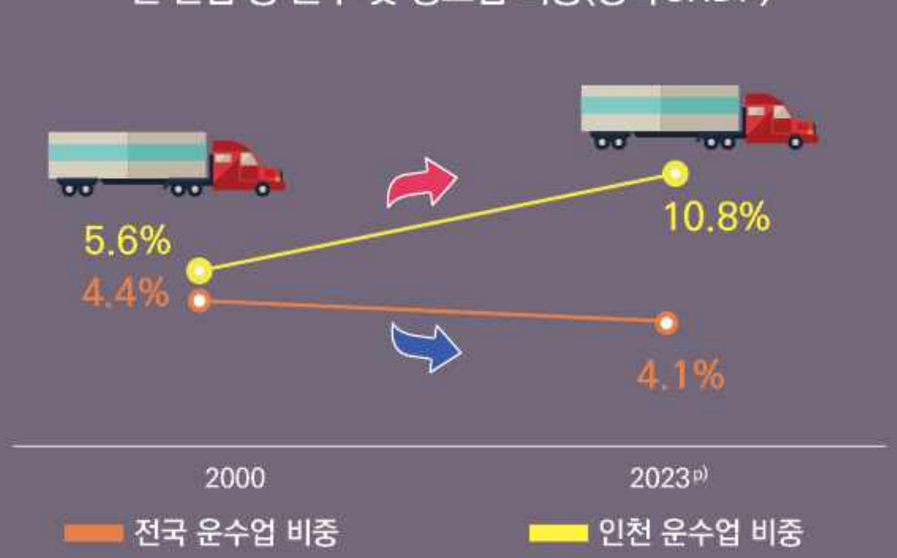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
주 : 1) p : 잠정치 2) 2020년 기준년 가격

4 대한민국 관문이자 물류·교통의 허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국내외 물류·교통의 중심지
운수·창고업 비중 전국 최고 수준, 인천이 대한민국의
물류·운송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전 산업 중 운수 및 창고업 비중(명목GRDP)



자료 : 통계청(KOSIS)
주 : 1) p : 잠정치 2) 2020년 기준년 가격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고, 산업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구조적 문제(높은 대외 의존도, 양극화 심화 등)까지
전체 산업계가 겪는 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변화의 물결, 전환점에 선 인천 경제

▶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관세 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전면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고,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예측되나,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된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약화되었고, 이는 민간소비 침체와 함께 내수 부진의 장기화,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여기에 조기 대선 등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닥뜨린 지금,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역과 도시의 성장이 있어야만 국가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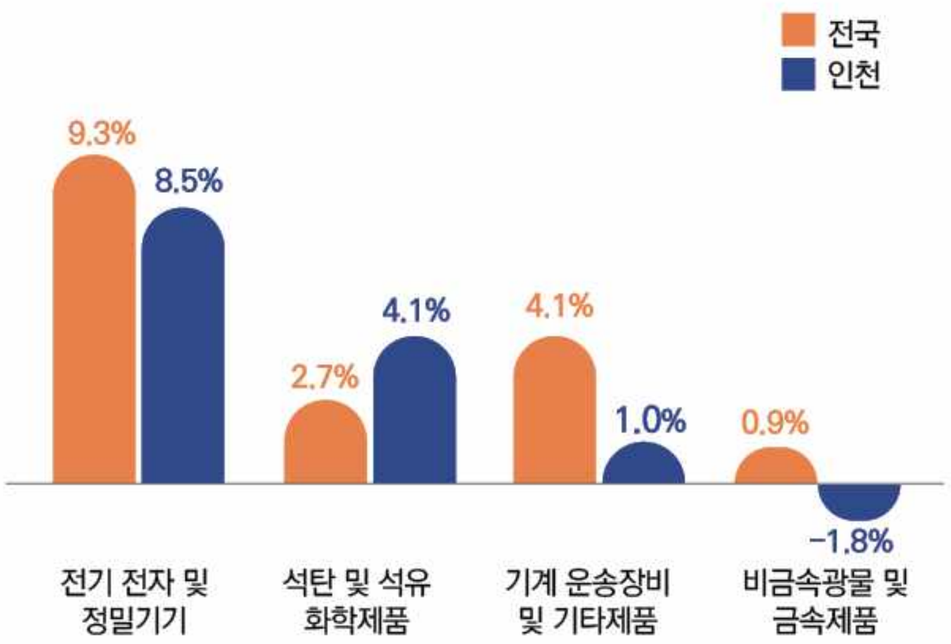
인천경제의 위기와 과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정체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 인천의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기계·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이 성장 정체에 직면, 산업단지는 노후화되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어, 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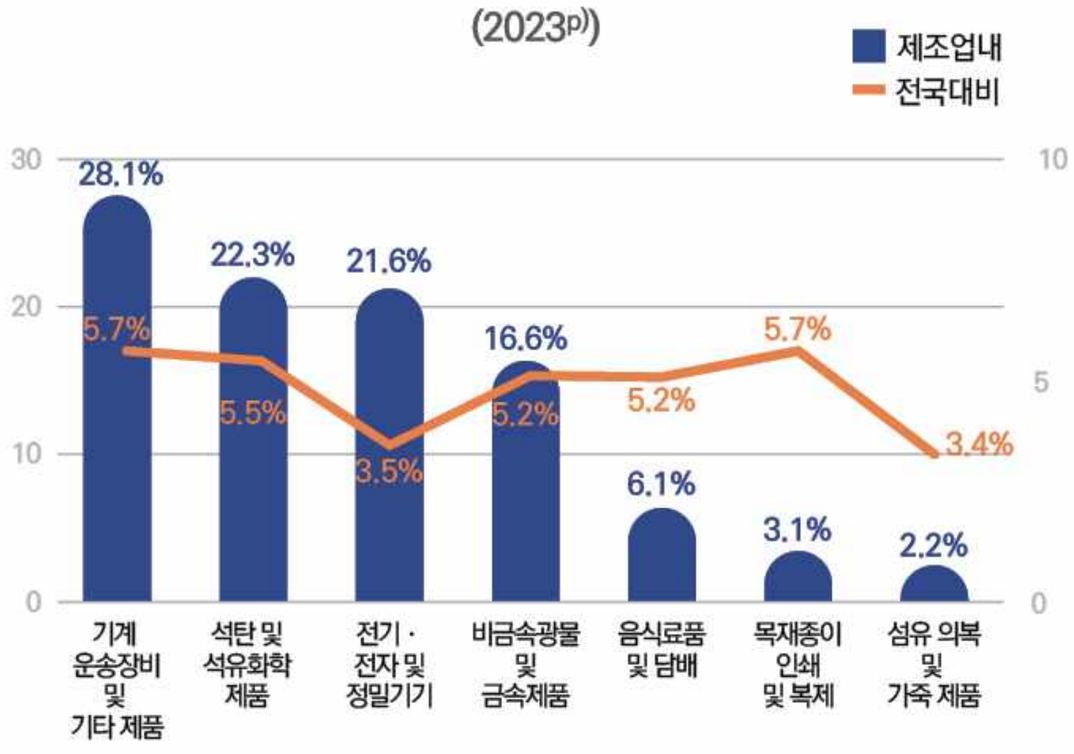
제조업 주력업종 성장 부진

인천지역 제조업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2000~2023p))



자료 : 통계청(KOSIS)
주 : 1) p : 잠정치
2) 2020년 기준년 가격
3) 2000~2023년중 연평균 증가율

인천지역 제조업 업종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2023p))



자료 : 통계청(KOSIS)
주 : 1) p : 잠정치
2) 2020년 기준년 가격

수도권 규제와 정책 소외

▶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인천은 기업 입지, 확장, 투자에 제약이 많고, 여전히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이중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 · 제도적 규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

성장관리권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 포함), 남동국가산업단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법률과 중앙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 따른 성장 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표적 규제
- 공장 신증설 제한, 공업지역 신규지정 금지
- 대학 신설 금지 및 증원 제한
- 택지, 도시개발, 공업용지 등 개발사업 제약

*자료 : 국토교통부,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2020)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 기반 약화

▶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원도심·신도심 지역 간 불균형, 낮은 수준의 개인 소득, 역외 소비 증가 등은 인천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면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심화

인천지역 연령별 인구 변화

자료 : 통계청(KOSIS)

낮은 소득 ·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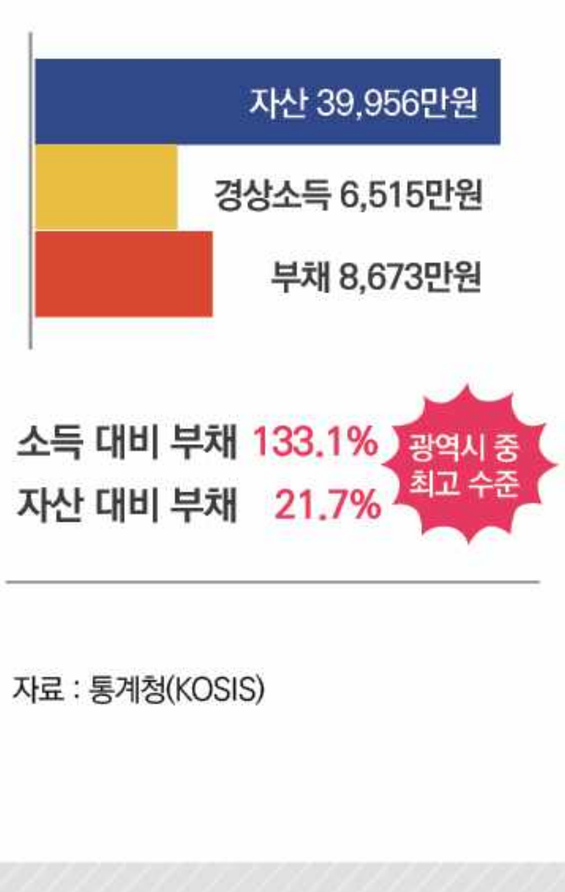
1인당 개인소득(2023p)

1인당 민간소비(2023p)

자료 : 통계청(KOSIS)
주 : 1) p : 잠정치

높은 부채

인천지역 가구당 소득 · 자산 · 부채(2024)



자료 : 통계청(KOSIS)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 난관을 넘어야합니다. 지역 기업과의 연계 강화, 에너지 분야 등 신산업 조기 육성, 기술 혁신 역량 강화 등 기업이 성장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인천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환과 지역 역량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도시로서 그 중심에서 성장과 혁신의 실험장이 되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하며,
새로운 정부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2025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INCHEON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기반 구축

- 규제 장벽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
-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 산업단지 혁신 역량 강화

미래 성장 동력 육성

- 바이오헬스 산업
- 반도체 산업
- 항공·미래 모빌리티 산업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
-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 지방자치권한 강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인천 경제
해법은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규제 장벽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업부담지수(BBI)* 106, 기업의 발목 잡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필요

* **기업부담지수**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 측정, 대한상공회의소, 정책평가연구원 발표('25.4).

- 인천 기업이 대외리스크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도록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수입선, 대체 공급망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전략 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 지원, 입지 규제 완화 등 필요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 저출산·고령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등 인천 제조업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
- 단기적으로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제한, 기업이 원하는 인력 채용 등 규제 완화 필요. 숙련 인력 비자 전환, 한국어 교육, 체류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추진
-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 산업·직무별 기업 수요에 맞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내국인 인력 육성 및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역할 강화

산업단지 혁신 역량 강화

- 인천의 17개 중 8개 산업단지는 조성 20년이 지나 노후화, 영세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기반·지원시설 개선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투자 수요 대응이 제한적이므로 규제 완화 필요
-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DX)은 제조 혁신,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화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

| 세 부 과 제 |

01 규제 장벽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

- 1-1 불필요한 기업 규제 완화
- 1-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 확대
- 1-3 정책 금융, 인력, R&D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1-4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02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 2-1 내국인 인력 육성을 위한 인천형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2-2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 복지 지원
- 2-3 고령인력 고용 지원 확대
- 2-4 외국인력 고용 제도(E-9, E-7) 규제 완화
- 2-5 외국인력 고용 제도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 2-6 스마트공장, AI 솔루션, 로봇 도입·확산 지원

03 산업단지 혁신 역량 강화

- 3-1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 3-2 노후산단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개선 지원
- 3-3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 3-4 디지털 전환 지원
- 3-5 전통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산업대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달려있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인천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5.6조원

인천 바이오산업
투자 규모 1조621억원

인천 바이오산업
인력 8,006명

*자료 : 2023년 국내 바이오산업실태조사, 한국바이오협회(2024.12)

반도체산업

인천 수출품목
1위

인천 시스템반도체 수출
173.4억원

인천 반도체 기업
668개

인천 반도체 기업 종사자수
13,068명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2024),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2)

항공·미래모빌리티 산업

- 인천국제공항
  - 국제여객운송 **세계 3위, 7,066**만명
  - 국제화물운송 **세계 3위, 290**만톤

*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2024 기준)

- 인천 **국내 최초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2021)
- 경인아라뱃길 **UAM 실증 운항** 예정(2025)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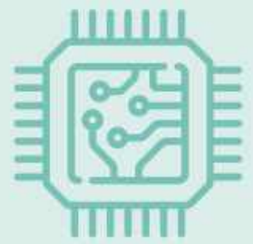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7GW 이상** 목표 조성 중
- 인천 전력자립률 **186%**(2023)
- 인천 수소생산기지 **2027년 완공** 예정

| 세 부 과 제 |

01 바이오헬스 산업

- 1-1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기 조성 지원
- 1-2 영종도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 1-3 K-바이오 랩허브 조기 구축
- 1-4 인천 퀀텀·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 1-5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

02 반도체 산업



- 2-1 반도체 후공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확대
- 2-2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인력·세제 지원
- 2-3 안정적인 전력, 공업용수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 2-4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허브 육성

03 항공 · 미래 모빌리티 산업

- 3-1 인천국제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구축
- 3-2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3-3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MRO)단지 조기 조성
- 3-4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사업 추진
- 3-5 도심항공교통(UAM) 특화도시 조성
- 3-6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3-7 자동차 부품 기업 사업전환 지원

04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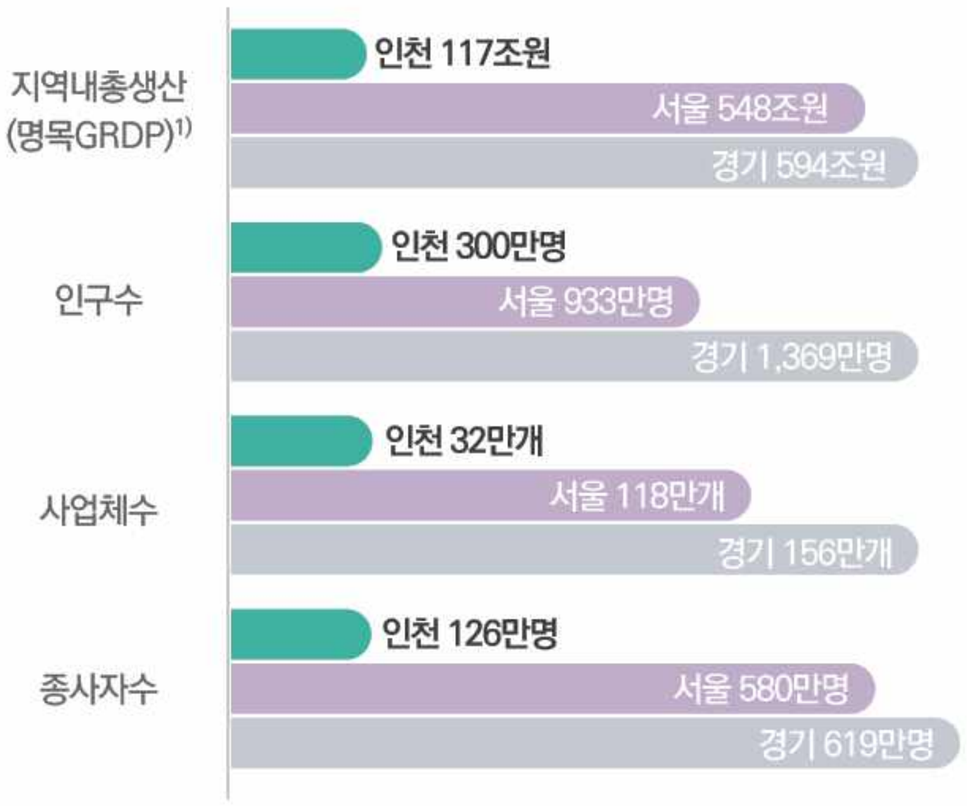
- 4-1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배후항만 조기 조성
- 4-2 인천 분산에너지특화단지 지정
- 4-3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력자립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4-4 ESG 경영 인센티브 지원 체계 마련
- 4-5 수소기술원 설립 등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인천이 동북아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

- 인천은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나 경제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나,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면적 개정** 필요
- 인천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체가 불가능, 신산업 실증, 규제 특례 등 특구 주요 지원을 받지 못해 **혁신 성장과 첨단기업 유치에 제약**



* 자료 : 통계청
주 1) 2023년 잠정치
2) 주민등록인구(2024년)
3) 전국사업체조사(2023년)

지방자치권한 강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 지역특성에 맞추어 지역 주민과 밀착된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필요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❶ 핵심 도로망 한계

(2023년 기준)

- 인천과 서울을 잇는 핵심 물류축인 경인고속도로는 노후화·상습정체로 기능 상실. 주변 산업단지, 노후 공업지역 재생, 단절된 인천 통합을 위해 지하화 조속 추진 필요
-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19.8km) 구간은 2029년 준공 예정이나 현재까지 연결 미흡해 항만 접근성에 한계

❷ 항만 배후 인프라 부족

-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의 66% 이상 인천신항에서 처리하나, 진입도로·주차장 등 기본 인프라 절대적으로 부족
- 화물차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 상습 교통체증 발생
- 인천신항 1-2단계 터미널(2027년) 개장, 2035년 550만 TEU 달성 목표에 맞추어 항만 전용도로·스마트 항만 등 기반 시설 확충 필요

❸ 내부 교통망 부족

인천시민 1인당 교통혼잡비용
연간 **145**만원,
전국 세 번째로 많은 비용 지출

* 교통정책평가지표 한국교통연구원(2023)

| 세 부 과 제 |

01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

- 1-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 1-2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 1-3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 1-4 규제자유특구 인천 역차별 해소

02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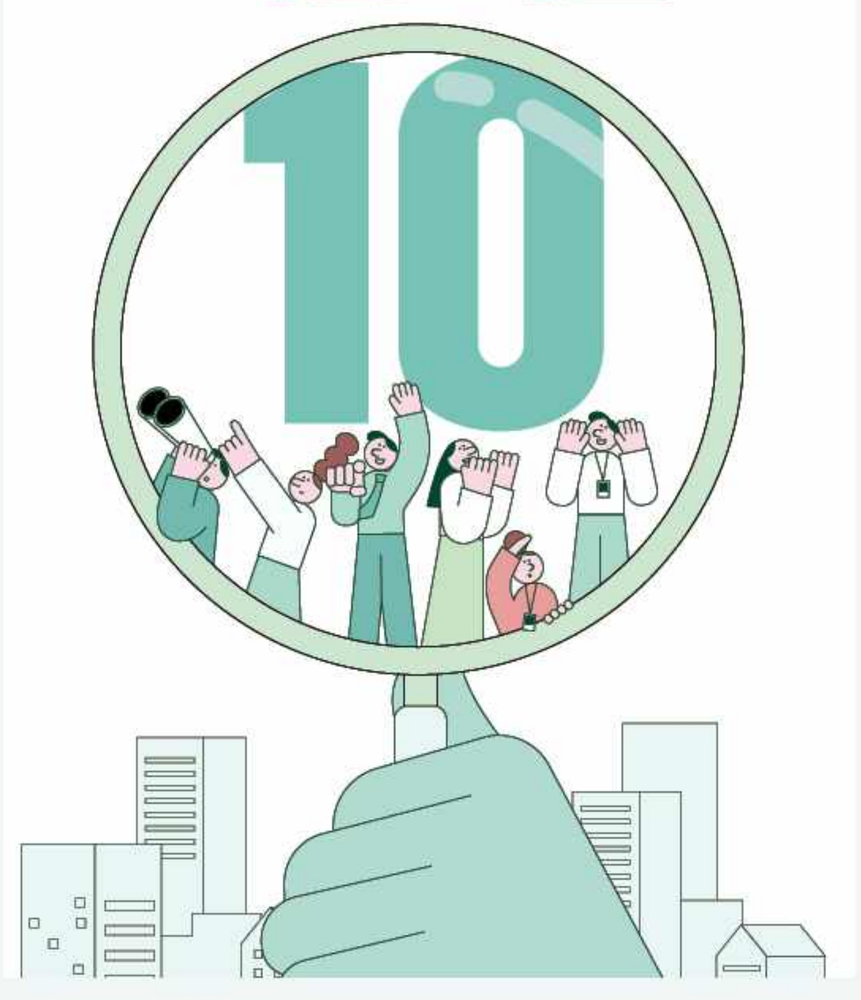
- 2-1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
- 2-2 경인전철 지하화
- 2-3 산업용지 부족 해소
- 2-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2-5 인천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 2-6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및 인천공항 연결
- 2-7 인천 지역 내부 교통망 확충

03 지방자치권한 강화

- 3-1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해양수산청, 중소벤처 기업청, 노동청, 환경청 등)
- 3-2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보장 및 지역과 상생 발전
- 3-3 중앙집중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지방 이양
- 3-4 인천 산업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인천 존치

새 정부에 바라는 인천경제계 핵심 숙원 10

새 정부에 바라는 인천경제계 핵심 숙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2028년 조기 완공

AI, 스마트공장의 인천 산업단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첨단벤처 융복합 공간으로 대전환

분산에너지특별법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력자급률 반영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기 조성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규제자유특구 인천 역차별 해소

공유수면 매립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